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5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	담당자	• 과장 윤의식, 사무관 조민우 • ☎ (044) 201-4904
	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박준형, 사무관 김동혁 • ☎ (044) 201-4912
	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영국, 사무관 최철승 • ☎ (044) 201-3324
	토지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상석, 사무관 나정재 • ☎ (044) 201-3402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도시재생 ‘투기 알리지’ ..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” 보도 관련

-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였고,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사업대상지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통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후 국토부와 감정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지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,
- 주택·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예고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·구별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,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병행(호가, 실거래가 등 분석)하였으며,
-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(세종시 금남면)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- * 해당 사업지는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,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의 4배 이상 상회
 - (지가) 연초대비 20%이상, 세종시 평균 5.2%, 전국 평균 2.9%
 - (주택) 연초대비 20%이상, 세종시 평균 4.2%, 전국 평균 1.3%

< 관련 보도내용(헤럴드경제, 12.15. 인터넷) >

◆ 도시재생 '투기 알려지'...정작 상승률 기준은 없다?

- '도시재생 뉴딜' 대상지 선정이 투기 우려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
- 부동산 상승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조민우 사무관(☎ 044-201-490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